

정대근 회장 퇴진, 농협개혁 촉구를 위한 한농연의 요구사항

| 정책조정실 한민수 차장 |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의 퇴진과 신경분리 등 총체적인 농협중앙회의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월 10일 정대근 회장의 구속 이후 각종 문제점들이 터지고 있으나, 10월 31일 공판마저 제대로 열리지 못한 채 11월 14일 정대근 회장에 대한 1차 선고 공판이 예정되어 있다. 특히 광주 지역본부 및 산하 지점의 비자금 사건, 핸드폰업체 VK 부실대출 사건, 6월 국정원 차명계좌 유용 사건 등 각종 사고가 터지고 있다. 또한 각 지역에서는 지역농협의 의도적인 쌀값 하

락 움직임으로 인해 농민조합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농연 및 농민단체들은 10월 30일 농협중앙회 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대근 회장 퇴진 및 농협개혁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아울러 11월 25일부터 농협중앙회 신관 및 각 지역에서 농성을 돌입한 후 29일에는 3만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래의 내용은 한농연의 요구사항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 편집자 주 –

1. 정대근 회장 퇴진, 농협 조직의 신뢰도를 조속히 회복

□ 각종 비리 혐의로 도덕성이 붕괴된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의 조기 퇴진 –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은 현대자동차로부터 양재동 하나로마트 부지 매각 관련 3억원을 수뢰하여 검찰로부터 징역 7년, 추징금 3억원을 선고 받았다. 정 회장은 검찰 구형 과정에서 유죄를 시인하였으나, 8월 중순 금보석으로 석방된 후 무죄를 주장하며 경영 복귀를 시도하고 있다. 이제라도 각종 비리와 도덕성 붕괴로 농민조합원과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된 정대근 회장은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다.

□ 부패와 타락으로 얼룩진 농협중앙회 조직의 전면 개혁이 절실 – 핸드폰업체 VK 관련 대출 294억 원 부실화, 면목동 지점의 국정원 차명계좌 유용 사건, 광주지역본부 및 산하 지점의 비자금 조성 사건 등, 정대근 회장 구속 이후 농협 조직 전체의 부패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다.

전체 농협 조직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농민조합원의 자산에 심각한 손실을 입힌 데 대한 응분의 책임 있는 조치를 시행하고, 농민조합원과 국민의 믿음을 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

2. 농협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위한 신경분리를 추진

□ 농협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위한 신경분리를 조속히 추진 – 금년 7월 제출된 연구용역에서는 최대 15년의 기간 동안 7조 8천억원의 추가자본금이 소요되므로, 농협중앙회는 “현 시기에서 신경분리는 실익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한 농민조합원 실익 증진, 농협 조직의 민주적 운영의 기초를 마련하려는 350만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농업 및 금융환경 급변에 대응하여 농민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농협중앙회 전체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신경분리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시 고려사항 – 우선, 농민조합원 실익 증진과 경제·교육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신경분리를 추진해야 한다. 특히 신용사업의 이익이 경제사업과 교육지원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확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신용사업의 지도·감독 권한은 계속 농림부가 담당토록 해야 한다. 신경분리 논의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가자본금 확보에 관한 소모적인 논란을 끝내고 경제사업 강화를 위한 농협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 방안의 마련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3. 농협중앙회 조직·인력·사업구조를 전면 개편

□ 시군지부를 폐지하여 농협중앙회 은행 지점 혹은 시군청 내 출장소로 전환, 일선 농협과 중복 경합하는 농협중앙회 금융점포 설치를 엄격히 제한 – 최근 괴주시지부의 LG필립스 지점 설치로 인근 월롱농협 등의 신용사업의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선 조합과의 불필요한 경합만을 일으키는 육상옥 조직인 시군지부의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다.

농민단체—농협중앙회 간 합의사항(2003. 7. 11)인 ‘1시군-1농협’ 13개 지역부터 우선 지점 또는 출장소로 전환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전 시군지부에 차장급 유통전문역이 1인 이상 배치되어 있으나 업무 전문성과

현장성이 떨어지고 가시적 효과가 없어 시군지부 역할 조정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또한 중앙회 신용점포와 조합간 경합문제가 매우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실사를 통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 시도지역본부를 시도연합회 체제로 개편, 판매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 현행 시도지역본부는 경제·교육지원사업의 지원 조직이라기보다는 일반 은행의 시도지역본부와 유사한 신용사업 위주로 운영중이다. 이를 개편하여 관내 일선 농협들의 당면 요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향식 연합체로 전환해야 한다. 시도지역본부장을 민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전환하고 판매기능 강화를 위한 역할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시군 공금고 평잔의 1%를 농민조합원 실익 증진을 위해 투입 – 우선 단기적으로는 시군지부가 운용중인 시군 공금고 평잔 중 1%를 일선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와 농가부채 경감 등을 위해 투입하도록 해야 한다.

□ 일선 농협 임직원·조합원 교육을 강화 – 아울러 협동조합의 이념 및 운영 원리, 농정현안에 대한 이해, 지역농업 활성화 방안 등 임직원·조합원 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4. 농협중앙회를 경제사업 지원 조직으로 전면 개편

□ 산지유통 강화를 통한 농협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 – 최근 농협중앙회는 NH투자증권 인수, LG카드 인수 실패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종합금융그룹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한 공격적인 확장 사업으로 신용업무에만 치중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경제사업은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 총 13조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 조합의 산지유통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하나, 농산물시장 개방과 급격한 유통환경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그 이유는,

- ▶ 생산자 조직화를 위한 농협 역할 미미 ▶ 생산자 조직화를 위한 농협중앙회 경제사업 지원방식 개편 필요
- ▶ 판매사업 강화를 위한 지역농협·전문가·주체 역량 미흡 ▶ 농협 조직 간에 협조관계 미흡
- ▶ 시장에서 거래교섭력 전무(全無) 등이 지적되고 있다.

□ 농협중앙회 경제사업 지원 조직을 품목별, 업종별 지원이 가능하도록 세분화해서 지원 기능을 강화할 것

– 이 때문에 농협중앙회의 지원 조직을 품목별로 전문화된 종합적인 생산·유통지원 조직으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 특히, 산지 조직화를 통한 시장 교섭력 확보에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업화, 규모화된 품목과 표준화, 등급화가 진행되는 과실류 등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조직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 일선 농협과 경합하는 각종 사업을 정리·이양하고, 농협중앙회는 일선 농협에 대한 총괄 지원 체제로 전환할 것 – 일선 농협의 유통·가공사업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음에도, 농협중앙회는 자체 수익 위주의 경제사업장 및 가공공장 등을 확충하며 경합중이다. 특히 경제사업 적자를 심화시키고 낙하산 인사의 온상으로 전락한 무분별한 자회사화를 즉각 중단하고, 기존 자회사는 일선 농협에 조속히 이양해야 한다(일선 농협 이관 사업장은 1995년 이후 총 6개에 불과).

5. 농협 자체 수매가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책정

□ 올 수확기 쌀 수급에 문제점이 없음에도, 일선 농협의 저가 매입방침으로 인해 일부 지역의 쌀값 하락 현상이 심화 – 올해 쌀값 계절진폭이 9.4%로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은 수준임에도, 농협 RPC들은 개소당 1억 5천만원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핵심 원인은 작년 수확기 높은 매입가 때문이 아니라, 농협 RPC들이 올해 1~5월에 무리하게 투매를 한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

그럼에도 경기, 강원, 충북 지역 농협 RPC들이 자체 수매가 결정시 정부의 공공비축제 우선지급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것을 결의하는 등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어 문제(한국농어민신문 등에서는 40kg 포대 벼 기준으로 4천원 이상 인하한 것으로 파악)

농협중앙회가 원가 이하 판매를 근절을 위한 지침을 전달했다고 하나, 지원책 및 적극적인지도 노력 부족, 농협 RPC들의 출혈 판매 경쟁으로 추가적인 쌀값 하락이 심히 우려된다.

특히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식량지원 중단, 정부 공공비축 매입물량 감소 등으로 쌀값 불안요인이 잠재된 상황에서 일부 농협 RPC의 저가 매입 방침은 남부지역의 쌀값 하락까지 부채질할 것으로 예상된다.

□ 올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대 농협 요구사항 – 농협중앙회의 무이자 벼 매입자금을 작년 수준보다 확대하여 지부 농협 RPC의 매입 자금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또한 RPC 원가이하 판매 금지를 위한 양곡부의 지도기능을 강화하고, 작년에 계절진폭이 좋았던 만큼 올해 원료곡 매입단가는 상향조정해야 한다.